

방법론으로서의 경영사*

- 무엇을, 어떻게 -

선재원**

요약

본 연구는 아담 스미스가 경제현상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한 「국부론」의 기본취지를 확인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사연구가 앞으로 ‘무엇을’ 즉 어떠한 주제를, ‘어떻게’ 즉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초보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당시의 사회적 격차의 근본원인인 독점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분업의 필요와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자유로운 시장거래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스미스는 시장거래의 기준이 해당 상품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른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거래의 근본적인 기준은 각 개인의 자기사랑 실현을 위해 투여한 노동력의 양을 기초로 한 자연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앞으로의 경영사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최근의 연구는 아담 스미스가 설명한 시장가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경제현상의 결과분석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경제주체간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제도에 관해 분석하는 경영사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경영사, 자유로운 시장거래, 제도, 자기이익, 자기사랑, 노동가치, 자연가격, 시장가격, 사회적 격차.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웹진’ 2010년 12월호에 실린 ‘경제사학의 최근 연구동향과 미시경제사 연구’와 ‘함께 읽는 인문학 강좌’ 2011년 하반기 제4강(11월 19일) ‘아담스미스, 국부론’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평택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sun@ptu.ac.kr, 031-659-8334.

I .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아담 스미스가 경제현상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한 「국부론」의 기본취지를 확인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과 역사」 창간을 맞이하여 경영사연구가 앞으로 ‘무엇을’ 즉 어떠한 주제를, ‘어떻게’ 즉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소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현재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신고전파경제학은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행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자유로운 시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최근연구가 행태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이준구 2008; 이준구 2009). 즉 행태경제학은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현재의 경제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예로 모든 주식거래자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주식거래에 의한 개인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결국에는 주식거래자체가 중단하게 되는데, 많은 주식거래자가 주먹구구식(heuristic)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주식거래시장은 존속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인간은 공정함(fairness)을 추구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신의 행태경제학의 지적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학의 초심 「국부론」을 연상케 한다. 이점에 대한 설명을 본론의 시작으로 삼고자 한다.

II . 아담 스미스와 「국부론」

1. ‘중상주의’와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1776)을 저술한 목적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중상주의’, 즉 영국 국내상공업자의 경제행위를 중시하는 사회경제사상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스미스는 영국 국내상공업자가 국가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독점하는 행위

를 비판했던 것이다. 이러한 스미스의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잘 알려진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1772)가 당시의 도덕체계로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개인의 사치와 이기심이 부를 창출한다’는 그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는 중상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거래의 자유’를 통해 독점행위를 근절시키려 했던 사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의 중상주의 비판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부론」의 요지는 영국 국내 상공업자들의 독점을 방지하도록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분업 즉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얻은 부가 각 국민에게 돌아가 경제적 격차, 궁극적으로는 사회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부론」은 원래 제목에 충실히 ‘각 국민이 갖는 부의 성격과 원인에 관한 고찰’로 번역되어야 함이 마땅하다(大内兵衛 · 松川七郎 訳 1959~1966).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국내 독점행위에 대한 비판이 출발점이었고, 사회적 격차의 해소가 종착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스미스의 자유주의에 대한 해석은 시장메카니즘의 중요성이 ‘거래의 자유’ 자체에 있는 것이지 결과인 ‘효용’ 창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아마티아 센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박우희 역 2001, 150-151).

2.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아담 스미스는 당시 일반인들에게 「국부론」(1776)보다 먼저 저술한 「도덕감정론」(1759)에 의해 많이 알려져 있었다(高島善哉 1968, 49-51). 「도덕감정론」의 요지는 인간은 합리적인 논리(로고스)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그것이 윤리(에토스)에 어긋나는 행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에토스를, 「국부론」에서 로고스를 각각 분리하여 설명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 「도덕감정론」에서 스미스는 당시 인간의 사회생활태도와 행위법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려했다. 따라서 「도덕감정론」은 윤리학 내용이 아닌 보다 폭넓은 사회적 인간행위의 원리원칙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국부론」에서 스미스는 결코 경제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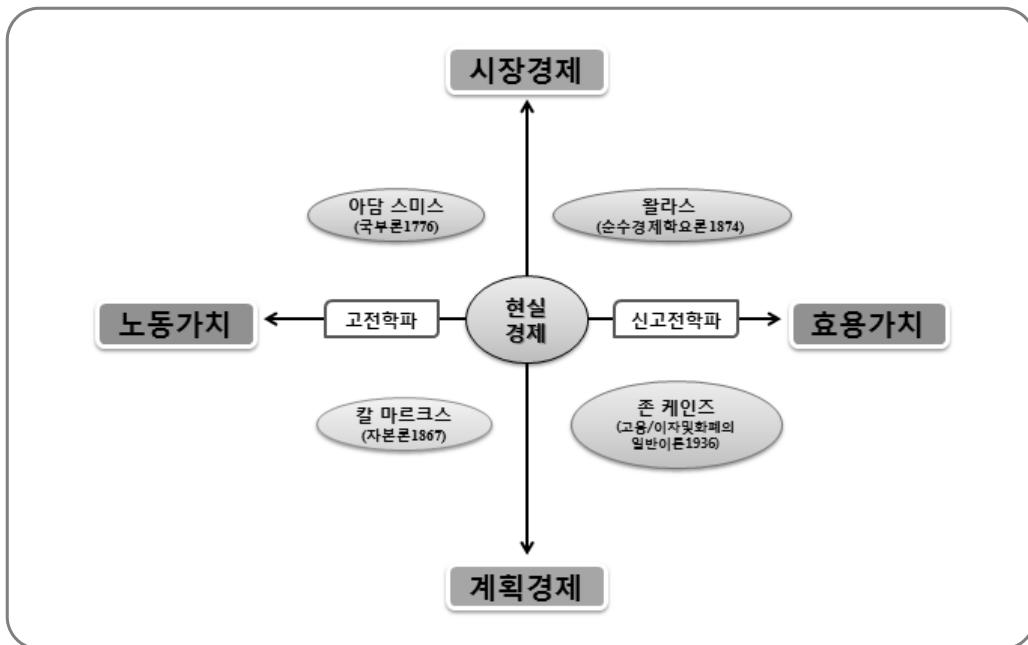
정치, 경제와 법, 경제와 교육, 경제와 역사, 경제와 문명이라는,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전체의 운용원리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高島善哉 1968, 51-52). 다시 말하면 「국부론」은 도덕, 정치, 법률과의 관련을 중시하면서 경제현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국부론」은 「도덕감정론」을 경제원리에 특화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부론」의 요지를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여 ‘자기이익’을 추구하면 사회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좁은 의미의 해석을 경계하게 한다. 즉 「국부론」에 자기이익(self-interest)이라는 표현이 1번, 이기적(selfish)이라는 표현도 3번 밖에 서술되지 않았고 그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즉 「국부론」에서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을 ‘자기이익’ 추구가 아닌 ‘자기사랑’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최윤재 2010, 50).

3. 「국부론」과 노동가치

그렇다면 「국부론」에서 스미스는 ‘자기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했던 ‘자유로운 거래’의 기준을 어떻게 규정했을까? 잘 알려져 있듯이 스미스는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을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즉 거래하는 상품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생산하는 데 투여된 노동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것을 이른바 ‘노동가치설’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노동가치에 의해 설정된 자연가격이 거래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 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태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자유로운 거래’의 기준을 ‘노동가치’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스미스의 사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그림 1]). 칼 마르크스는 영국 산업혁명을 직면하면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점을 간파하여 가치의 기준을 노동력투입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은 스미스를 계승하였지만, 시장거래에 기반을 두어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편 왈라스는 경제행위의 최적기구가 ‘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스미스를 계승하나, 하나의 가치에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이라는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한다는 스미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했다. 즉 시장거래 할 때의 가격은 ‘노동가치’라는 객관적 가치가 아닌 ‘효용가치’라는 주관적 가치에 결정된다고 생각하여, 시장거래

에서의 자연가격 개념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왈라스의 생각은 이론적 발전에는 기여 했으나, 스미스 주장의 출발점인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확보하여 분업을 발달시키고 그 결과 사회적 격차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에서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상품을 생산하여도 누군가가 효용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일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격차 확대의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인 것이다. 효용가치에 기준한 시장거래의 문제점을 극복하려했던 케인즈는 시장거래에서의 제3자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점에 대해 필자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림 1]에서의 케인즈의 위치도 적절한가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1] 「국부론」과 노동가치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제현상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아담 스미스가 ‘무엇을’ 주장하려했던가를 현재의 주류경제학이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II. 한국경제사연구와 경영사연구

1. 경제사연구와 그 분석방법의 특징

경제사연구란 경제학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역사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두 가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두 가지 위험이란 역사현상 자체의 분석에 치중하여 그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이론적 함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 경제학이라는 보편적 현상에 관심을 과다하게 기울인 나머지 특정지역과 일정시기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경제사연구 분석방법의 특징은 특정지역과 일정시기에 발생한 역사현상을 경제학이라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사회과학방법론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의 유일한 경제사연구 저널인 「경제사학」에 실린 최근 10년간의 논문주제를 지역별, 시기별로 분류해보았다(〈표 1〉).

〈표 1〉 논문주제의 지역별 · 시기별 분포(2001~2010)

지역별	논문수	%	시기별	논문수	%
유럽	8	7.8			
미국	4	3.9	20C 이전	33	32.4
아시아	10	9.8	20C 전반	49	48.0
한국	78	76.5	20C 후반	13	12.7
비교	2	2.0	장기시계열	7	6.9
계	102	100.0	계	102	100.0

자료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먼저 각 년도의 논문게재수가 약 10편으로 절대숫자 자체가 적다는 것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경제학 분야에서의 역사현상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상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적

역사현상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생겨난 탓에 경제적 역사현상을 당시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한 뒤에 현재의 메커니즘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역사적 분석을 혼동하는 연구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형 경제발전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의 관심이 매우 희박해졌다는 한국 사회과학연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한국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20세기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절반에 가깝고 20세기 이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0%를 넘고 있다. 지역별 분포와 시기별 분포를 교차하여 분류해보면 20세기 이전 한국을 주제로 한 논문수가 28편(27.5%)이었고 20세기 전반 한국을 주제로 한 논문 수는 37편(36.3%)이었다.

지역별로는 한국에 편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관한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 간 비교연구의 확대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시기별로는 20세기 후반,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연구가 적은 것이 주목된다. 물론 장기시계열 연구논문의 경우 2차 대전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주요 분석시기는 2차 대전 이전이다.

「경제사학」에 실린 연구논문을 근거로 최근의 경제사학 연구동향을 평가하면 20세기 전반, 즉 식민지시대의 경제현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다.

2. 식민지경제 연구의 성과와 발전방향

이상과 같이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의 경제사연구는 식민지시대의 경제현상과 그 성과에 대해 관심이 높았었다.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는 한국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던 연구자들이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인 본격적인 연구는 외국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사례를 성공적 발전도상국 모델로 제시하려 했던 연구에서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배경을 식민지시대에서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자극되어 경제사연구자들의 일부가 중심이 되어 일정지역의 거시적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국민계정이라는 분석개념에 입각하여 당시의 통계에 기초해 추계를 하였는데 그 성과를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사연구분야에서 이른바 OECD에 진입하는 기준으로도 평가되는 한국 독자적인 장기경제시계열 추계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이 반영되어 10년 동안 식민지시대 연구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한 시기가 식민지시대였다고 평가함으로써 식민지시대 ‘개발’의 영향을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연구1). 이에 대해 일제지배에 의해 전통적인 경제적 질서가 파괴하여 비교적 순탄했던 한국경제발전의 길을 방해하였다는 종래의 주장(연구2)과 식민지시대 ‘개발’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소득분배는 일본인에게 집중되어 해방 후 스스로 경제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실패하였다는 새로운 주장(연구3)이 대립하고 있다.

이상의 주장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결과는 확인할 수 있어도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거시경제 수준의 분석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식민지시대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구1’은 경제학이라는 보편적 현상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한반도라는 특정지역과 식민지기라는 일정시기의 특징을 도출하기 어려웠고, ‘연구2’와 ‘연구3’은 역사현상 자체의 분석에 치중하여 그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경제발전 및 분배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현재까지의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제도의 형성과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야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분석시기를 이른바 ‘공백기’라고 불리는 해방 후부터 1950년대 이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야말로 식민지시대의 유산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편되어 7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그렇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3. ‘공백기’ 연구사례

여기에서 경영사연구(미시경제사연구)란 경제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경제주체간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제도에 관한 분석을 의미한다. 즉 경제제도의 형성

과정과 산업조직 및 시장에서의 기업활동에 관한 분석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경제발전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이 필수불가결한 시기인 ‘공백기’에 관한 공동연구 5편의 연구결과(*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007)를 소개하여 경영사연구 방법에 기초한 구체적인 분석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Korean Industry:

Micro Economic Historical Analysis, 1945~61

- I. Resources Input and Institutional Design by the Korean Government
 1. Evolution of Aid-depending Economy and Search for Self-sustaining Economy
 2. Building of Human Resources and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 II. Strategy of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Enterprises
 3. Reconstruction and Engineers on Cotton Textile Industry in Korea
 4. Progress of Planned Shipbuilding and Trial of Shipbuilding Industry Promotion
 5. The Emergence of Private Coal Mines and DHCC's Management Stabilization in the 1950s

한국정부는 연합국의 지휘아래 있었던 과도정부시기(1945~8)부터 최종 결정권한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한국경제의 재건에 참여하고 또한 이끌어 갔다. 그렇지만 한국정부는 자금 및 생산수단 등의 자원투입을 일본과는 달리 원조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내역은 소비재보다 중간재 및 원료의 비중이 커졌다. 당시 한국정부의 재정은 비록 원조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절반 이상의 재정을 인프라 구축과 민영기업의 재건에 투입하였다. 한편 한국정부는 경제재건의 필수조건인 인적자원의 조달을 위해서도 정부수립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기술도입은 한국전쟁 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성과를 올렸다. 또한 50년대 말까지의 기술도입의 경로는 식민지기의 일본에서부터 원조 제공국인 서방선진국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백기의 한국정부와 민간은 재정투융자

를 통한 자금조달과정과 인적자원조달 및 기술도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각 기업은 혼돈스러웠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안정적인 경제계획이 실행되었다고 알려진 60년대에 조차도 산업정책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해갔는데, 당시의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은 전략실행과정에서 성공하는 반면 실패도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산업이자 민영기업의 산실이었던 면방직산업의 기업들은 원조를 통해 원면조달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복귀함에 따라 기술공백도 완화됨에 따라 한국전쟁 첫해인 1950년을 제외하면 설비, 생산, 생산성, 수익률 면에서 순조롭게 회복되어갔다. 1970년대 한국경제를 이끌어간 산업인 조선에 관한 산업정책은 식민지기의 정책과 연속적인 형태를 띠었지만 선박수요 예측 및 자금조달의 실패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행착오는 60년대 70년대 산업정책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듯 조선산업에 관하여 실패한 정책은 경쟁상대가 없었던 국영조선기업을 경영실패로 이어지게 하였지만, 에너지산업인 석탄산업의 국영기업은 민영기업으로부터 최고경영자를 영입하여 경영합리화를 단행한 결과 석탄수요의 증대로 대거 시장에 진입한 민영기업과 경쟁하여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

해방 후 혼돈스러운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각 기업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새로운 경제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경제제도의 형성을 정부가 주도했다는 면에서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조정해야 하는 원조에 의존했다는 점은 고도성장기의 금융제도의 차이, 즉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보다 자율성이 크다는 역사적 전제가 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한국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술자를 양성하고 기술의 도입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울 수는 있었지만, 기술을 정착시키고 신기술을 개발하기까지는 식민지로부터 대량의 기술자들이 귀환한 일본에 비교하여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방 후~1950년대 한국경제발전의 형태를 역사의 변함없는 진리인 전시대, 즉 식민지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성격이 다른 제도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맺는 말

경영사연구란 무엇을 어떻게 분석해야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본 논문의 과제였다. 물론 이 짧은 분량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경제현상연구의 초심과 현시점에 대해 초보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무엇을’과 ‘어떻게’의 논리적 연관성을 제대로 제시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현상을 최초로 체계화한 아담 스미스는 당시의 사회적 격차를 초래하는 독점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분업의 필요와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자유로운 시장거래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스미스는 시장거래의 기준이 해당 상품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른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거래의 근본적인 기준은 각 개인의 자기사랑의 실현을 위해 투여한 노동력의 양을 기초로 한 자연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앞으로의 경영사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최근의 연구는 아담 스미스가 설명한 시장가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는 경제현상의 결과분석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경제주체간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제도에 관해 분석하는 경영사연구가 철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이준구, 2008, “행태경제학의 등장과 경제학의 미래”,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47권 제1호: 1-82.
- _____, 2009, 「36.5℃ 인간의 경제학: 경제행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 탐구」 랜덤 하우스.
- 최윤재, 2010, “해제: 맨더빌의 삶과 생각”, 최윤재 역, 「꿀벌의 우화: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 문예출판사: 11-83.
- 高島善哉, 1968, 「アダム・スミス」, 岩波書店.
- 八木紀一郎, 1993, 「経済思想」, 日本経済新聞社.
- Mandeville, Bernard, 1772, *The Fable of the Bees, or, Private Vices, Public Benefits*, Edinburgh: [s.n.](최윤재 역, 2010, 꿀벌의 우화: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 문예출판사).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박우희 역, 2001,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 Smith, Adam, 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London: A. Millar (박세일 · 민경국 역, 2009,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 _____,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T. Cadell (大内兵衛 · 松川七郎 訳, 1959~1966, 「諸国民の富」, 1-5卷, 岩波書店; 김수행 역, 1992, 「국부론」, 상 · 하, 동아출판사).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7,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0-4.